



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

김동겸 연구위원

전 세계적인 COVID-19 확산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, COVID-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.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악화 가능성은 ① 근로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고, ② 감염병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소득계층 및 고용형태에 따라 그 충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.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이는 다시 건강불평등, 교육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■ [검토배경] 전 세계적인 COVID-19 확산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, COVID-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

- 최근 국제통화기금(IMF)은 COVID-19 사태에 따른 각국의 봉쇄조치(Great lockdown)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2008~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욱 악화되어 -3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¹⁾
 - 한편, IMF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-1.2%로,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(-5.1%)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
- 국제노동기구(ILO)는 COVID-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270만 명 증가한 2,47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²⁾
 - 전 세계 노동자 33억 명 중 81%가 해고, 임금 삭감,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음
- 질병으로 인한 불평등(Inequality) 악화 현상은 “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덫(Disease-driven Poverty Trap)”,³⁾ “감염병 대유행과 불평등 간 순환고리(Pandemic-Inequality Feedback Loop)” 등으로 지칭됨⁴⁾

1) IMF(2020. 4. 14), *World Economic Outlook*

2) ILO(2020. 4. 7), “ILO Monitor 2nd edition: COVID-19 and the world of work”

3) Matthew H. Bonds et al.(2009), “Poverty trap formed by the ecology of infectious diseases,” *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: Biological Sciences*, 277(1685)

4) The New York Times(2020. 3. 16), “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,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”; 반면, 경제사적으로 볼 때 흑사병과 페스트 등 대형 전염병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반대급부로 노동가치 상승, 임금상승 효과가 동반돼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가져왔다는 견해도 있음(IFPRI(2020. 3. 20), How much will

- [전달경로]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은 (1) 직업군별로 감염에 대한 위험도에 차이가 있으며, (2) 감염병 확산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경우 계층별로 받는 충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

- 개인의 직무에 따라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나타나며, 이에 따라 직업군 별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남
 - 비감염성 질병(Non-communicable Disease)의 경우 교육, 소득 등 개인의 사회·경제적 위치 (Socio-economic Position)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 연구결과임⁵⁾
- 또한, 경기불황 시에 고용형태에 따라 실업위험이 달리 나타나므로, COVID-19 사태 장기화는 소득 불평등 악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- 한편, COVID-19 확산에 따라 각국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, 온라인 학습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, 각 개인의 디지털 격차(Digital Divide)가 향후 노동시장 성과 및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음⁶⁾

〈그림 1〉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악화 요인

감염병 위험 노출	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및 고용위험	잠재요인 : 디지털 격차
〈감염병 취약계층〉 ■ 감염위험 노출 및 수입 감소 ⇒ 직업/직종별 차이, 고연령층 등	〈소득 취약계층〉 ■ 실업위험, 신규취업 제약 ⇒ 영세자영업자, 시간제근로자, 여성, 편부모가구 등	〈디지털 소외계층〉 ■ 정보취득, 학습기회·적응 한계 ⇒ 저소득 가구, 독거노인 등

- [노동시장: 건강위험] COVID-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(Social Distancing)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으나, 개별 경제주체마다 노동시장에서 처한 근로환경에 따라 건강위험이 상이함

- 밀집된 근무환경 최소화를 위해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, 재택근무, 유연근무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, 산업 특성상 현장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
 - 사무직·전문직 종사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정 기간 일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으나, 배달원, 식당종업원, 운수업 및 건설업 종사자 등은 이전과 동일한 근로환경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음
 - 한국정보화진흥원(2019)이 5인 이상 1,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재택근무와

global poverty increase because of COVID-19?)

5) The Harvard Gazette(2020. 3. 24), "Will inequality worsen the toll of the pandemic in the U.S.?" ; Faheem Ahmed et al.(2020), "Why inequality could spread COVID-19, Lancet Public Health"

6) PHYS.ORG(2020. 3. 12), "Pandemic exposes 'digital divide' as schools, workplaces close"

- 유연근무제의 활용비율은 각각 24.5%, 49.0%이며, 업종별 직무에 따라 도입률에 차이를 보임
- (감염에 따른 소득상실) 특히,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아, 감염 시 고용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
 -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고, 저소득근로자들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

〈그림 2〉 재택근무 활용실태와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
 〈업종별 재택근무 비율〉 〈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〉



자료: 한국정보화진흥원(2020), 「2019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」; 통계청, 마이크로데이터

- [노동시장: 실업위험] COVID-19 사태가 장기화 되어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고용시장 환경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, 금융위기 경험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영향은 영세 자영업자, 임시직·일용직,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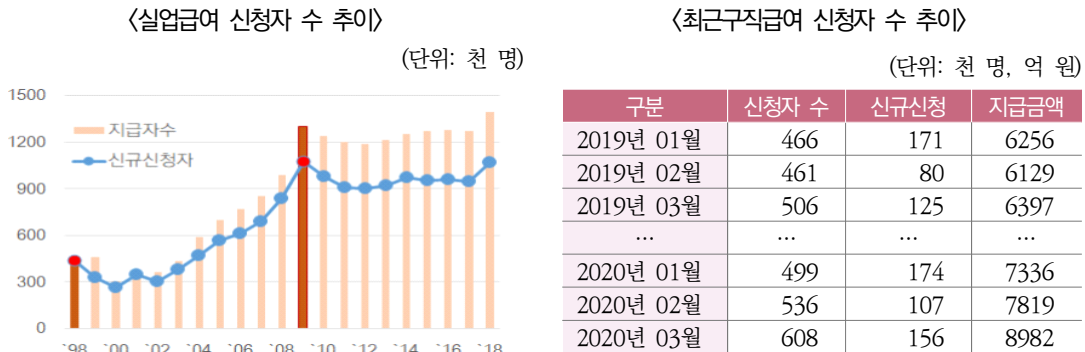
- (고용상태) 2008~2009년 금융위기 당시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을 보면, 상용직 근로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, 임시·일용직, 자영업자, 청년(노동시장 신규 진입자), 여성 등의 경우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⁷⁾
- (임금수준) 금융위기 당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진행되었으며, 이로 인해 해당가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
 - 특히,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 중 상용직근로자 임금은 평균 2.4% 감소하였으나, 임시일용직은 8.2% 감소하였음
 - 경제위기에 따라 대규모 실업과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경우 근로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게 됨
- (실업증가) 특히, COVID 19 확산으로 국내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3월 기준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1천 명이 늘어났으며, 지급금액은 8,982억 원을 기록함⁸⁾

7)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

8) 실업급여 수급실적의 경우 자영업자, 특수고용직 등은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므로,

-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, 제조업, 건설업 등의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3〉 실업급여 지출 현황



자료: 통계청(2019)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-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; 고용노동부(2019),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

- [주요국 정책대응] 주요 선진국에서는 COVID-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,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 등을 추진 중에 있음

- (근로환경 개선)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지원,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무적·비재무적 지원을 시행함
 - 일본의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드는 비용의 50%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며, 이탈리아에서는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웹사이트 개선을 통해 교육을 진행함⁹⁾
- (소득지원: 감염자) COVID-19 감염에 따른 소득상실을 지원하기 위해 포르투갈과 영국에서는 각각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상병급여(Sickness benefit) 대기기간을 폐지하였으며, 독일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대체급여(Income replacement benefit) 신청을 허용하고 있음¹⁰⁾
- (수요충격 지원)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근로시간 단축제도(Short Time Work scheme)가 노동 시장에 미친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하여, 이탈리아, 프랑스 등에서는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조건부로 근로시간단축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함

- [시사점] COVID-19 사태 장기화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이는 다시 건강불평등, 교육불평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**kiqi**

COVID-19로 인한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

9) <https://solidarietadigitale.agid.gov.it/>

10) OECD(2020), "Supporting people and companies to deal with the COVID-19 virus"